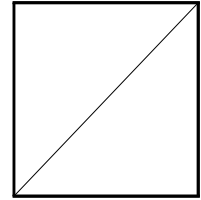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2. 8. (임시 제 2 차)	

(주)코썬바이오(舊(주)현성바이탈)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2. 8.

## 1. 의결주문

(주)코썬바이오(舊(주)현성바이탈)의 제12기(2017.1.1.~2017.12.31.)부터 제14기(2019.1.1.~2019.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코썬바이오(舊(주)현성바이탈)의 제12기(2017.1.1.~2017.12.31.)부터 제14기(2019.1.1.~2019.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주)코썬바이오(舊(주)현성바이탈)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계상 (‘17년 연결 22,251백만원, ‘18년 연결 △11,027백만원 별도 852백만원, ‘19년 연결 △11,224백만원 별도 △840백만원)</li><li>○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등)등 과소·과대계상 (‘17년 연결 35,226백만원 별도 58,663백만원, ‘18년 연결 △23,642백만원 별도 28,977백만원, ‘19년 연결 △11,584백만원 별도 △28,977백만원)</li><li>○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li></ul>
조치 내용 *1,*2,*3, *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권발행제한 10월</li><li>○ 감사인 지정 3년</li><li>○ 前재무담당임원 000 해임권고 상당</li><li>○ 시정요구</li><li>○ 과태료 36백만원</li></ul>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 수준과 동일하여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를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 계상 :

- ('17년)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2)]
- ('18년, '19년)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가.3)]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등) 과대계상 등 :
  - ('17년)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2)]
  - ('18년, '19년)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가.3)]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가중 및 감경 적용)

○ 기본조치의 가중 : 2단계 가중

- (제12기)위법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이익이 당기손실로 변동되므로 1단계 가중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4]
- (제12~14기)위반사항으로 인한 최종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64배 이상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5)]

○ 기본조치의 감경 : 해당사항 없음

- 회사가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20.5.7.)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정정공시('20.6.8.공시, 정정공시 기한만료일은 '20.6.7일이나 공휴일이므로 익일('20.6.8)이내)하였으나 일부에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분감경을 적용하였으나, 1단계 감경효과 없음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2)]

\*4 '20.8.11 회사가 상장폐지 되어 과징금 대신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가.(1)]

\*5 前 재무담당임원 〇〇〇은 '17년~'19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담당임원 해임권고 대상이나 '20.6.12. 퇴사하였으므로 해임권고 상당 통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6 회사가 일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하지 않아 시정요구 조치를 부과

※ 〇〇〇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前대표이사 〇〇〇과 前재무담당임원 〇〇〇의 배임 혐의 가능성에 대해 동 사항을 수사참고사항으로 검찰에 既송부('21.1.19)

나. 회계법인 000, 00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p>지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22,251백만원, ‘18년 연결 △11,027백만원 별도 852백만원, ‘19년 연결 △11,224백만원 별도 △840백만원)</li> <li>○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35,226백만원 별도 58,663백만원, ‘18년 연결 △23,642백만원 별도 28,977백만원, ‘19년 연결 △11,584백만원 별도 △28,977백만원)</li> </ul>
<p>조치 내용 *1,*2,*3, *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법인000(중과실 I →가중시최대) [‘17년~‘18년 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li>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li> <li>※ 지정제외점수 150점</li> </ul> </li> <li>□ 00회계법인(과실 I →가중시최대) [‘19년 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li>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li> <li>※ 지정제외점수 40점</li> </ul> </li> <li>□ 공인회계사 000(중과실 I →가중시최대) [회계법인000: ‘17년~‘18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정지건의 2년</li>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li> <li>○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16시간</li> </ul> </li> <li>□ 공인회계사 000(중과실 I 단계) [회계법인000 : ‘17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정지건의 1년</li>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li> <li>○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16시간</li> </ul> </li> </ul>

	<p>□ 공인회계사 000(과실 I →가중시최대)</p> <p>[회계법인000 : '18년 보조책임자·계정담당자, 00회계법인 : '19년 주 책임자·담당이사 및 계정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li> <li>○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12시간</li> </ul>
--	---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낮아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를 적용  
(다만, 공인회계사 000에 대한 조치는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  
치수준과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동일하여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  
준**을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 당시 및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17년) 및 과실('18년, '19년)**

('17년)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3)]

i)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로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고

ii)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에 해당하므로  
'중과실'로 판단[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18년, '19년)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나.4)]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17년) 및 과실  
( '18년, '19년)**

('17년)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3)]

i)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로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고

ii)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에 해당하므로 ‘중과실’로 판단[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18년, ‘19년)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나.4)]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 당시 및 현행 양정기준)

#### ○ 기본조치의 가중 : 1단계 가중

- (제12~14기)위반사항으로 인한 최종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64배 이상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나.4), 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나.4)]

#### ○ 기본조치의 감경 : 해당사항 없음

- 회사가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20.5.7.)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정정공시(‘20.6.8.공시, 정정공시기한만료일은 ‘20.6.7일이나 공휴일이므로 익일(‘20.6.8)이내)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므로 “회사가 VI.3.가.2)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분감경을 적용하였으나, 1단계 감경효과 없음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나.4)]

### \*4 공인회계사 000는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18.02.07. (주)000에 대한 감리결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제12,13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가중 [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나.1)]

### \*5 공인회계사 000(‘17년) 및 000(‘18년)은 보조책임자로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하므로 1단계 감경[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 4. 참고사항

가. 제2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1.2.1.)

나. 관계법규(붙임1)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 (주)코썬바이오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코썬바이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코썬바이오(舊 (주)현성바이탈)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00 000 000 00000000 0000

☐ 000 [(주)코썬바이오(舊 (주)현성바이탈)의 前 재무담당임원]

- 생년월일 : 0000년 0월 0일
- 주소 : 000 000 000 00

###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주)코썬바이오에 과태료 36,0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주)코썬바이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발행을 조치일로부터 10개월간 제한\*한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



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주)코썬바이오는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부터 2024회계연도(2024.1.1.~202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코썬바이오는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 (주)코썬바이오의 前재무담당임원 000에 대하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부과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주)코썬바이오는 제12기(2017.1.1.~2013.12.31.)부터 제14기(2019.1.1.~2019.12.31.)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 계상

[ '17년 연결 22,251백만원, '18년 연결 △11,027백만원 별도 852백만원, '19년 연결 △11,224백만원 별도 △840백만원]

- 회사는 종속기업인 000이 거래처(판매회원)에 대한 신용조사나 채권담보가 없는 할부판매에서 발생한 소액의 다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집합하여 연령분석을 하면서 거래처별로 집합하지 않고 대손율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용한 사실이 있으며,
- 000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해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별도재무제표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등)등 과소·과대계상

[‘17년 연결 35,226백만원 별도 58,663백만원, ‘18년 연결 △23,642백만원 별도 28,977백만원, ‘19년 연결 △11,584백만원 별도 △28,977백만원]

- 회사는 종속회사의 ‘17년10월 할부판매중단으로 영업에 유의적인 상황변화가 예상됨에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등의 손상평가를 소홀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영업권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17년) 과거 추정 한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 차이 및 가정의 합리성 평가 미 실시, 손상검토시 할부중단 효과 미반영,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차감할 운전자본 가산 및 수소수기 성장률 추정 오류 등

(‘18년)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출액 추정

○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 회사는 ‘19.9.6.에 소액공모(999백만원)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17년도 및 ‘18년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내역

공시일자	공모내역	거짓기재 내용			
‘19.9.6.	유상증자 (999백만원)	‘17년	별도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중과실
			연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영업권 등 과대계상	
		‘18년	별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과실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연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영업권 등 과대계상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제56조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다면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회사에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통보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 등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

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등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하는 발행인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 C87, BC122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B5.5.5 등

-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됨

- 금융자산의 집합적인 손상검토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며,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묶을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2, 14, 33, 34 등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 징후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되는 등 자산손상의 징후를 고려해야 함

- 사용가치 측정시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된 현금흐름과 실제 생긴 현금흐름이 차이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별지2)

## 회계법인 000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000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 회계법인 000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0 0000000 00-0 00000 00

#### ☐ 000 ['17년~'18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 0000 000 00 0000 000000

#### ☐ 000 ['17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 0000000 0000 000000

##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회계법인 000는 (주)코썬바이오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7회계연도~2018회계연도 감사보수액 중 가장 큰 금액의 80%를 조치서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고,
  - (주)코썬바이오의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부터 2025회계연도(2025.1.1.~2025.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정제외점수 150점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에게 직무정지 2년의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며,
    - 공인회계사 000는 (주)코썬바이오의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부터 2026회계연도(2026.1.1.~2026.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에게 직무정지 1년의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며,

- 공인회계사 000은 (주)코썬바이오의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부터 2025회계연도(2025.1.1.~2025.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 000(이하 '감사인')는 (주)코썬바이오(이하 '회사')의 제12기(2017.1.1.~2017.12.31.)부터 제13기(2018.1.1.~201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22,251백만원, ‘18년 연결 △11,027백만원 별도 852백만원]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종속회사에서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나 채권 담보가 없는 할부매출채권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별도재무제표 감사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35,226백만원 별도 58,663백만원, ‘18년 연결 △23,642백만원 별도 28,977백만원]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등의 손상검토를 하면서 종속회사의 할부판매 중단효과,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가정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별지3)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000,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000 0000(000) 00

#### ☐ 000

[’18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19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0000 000-000000

###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은 (주)코썬바이오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9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5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고,
- (주)코썬바이오의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부터 2024회계연도(2024.1.1.~2024.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정제외점수 40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은 (주)코썬바이오의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부터 2024회계연도(2024.1.1.~2024.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00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코썬바이오(이하 '회사')의 제14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9년 연결 △11,224백만원 별도 △840백만원]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종속회사의 매출채권 대손상각비용과 별도재무제표에 계상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대손상각비용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감사의견에 각각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9년 연결 △11,584백만원 별도 △28,977백만원]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계상된 영업권 등과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비용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감사의견에 각각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510 등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⑤ 경고 또는 주의, ⑥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 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연간 20 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붙임1)

## 관 계 법 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 제>

③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삭 제>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 략>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 이었다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5. <생 략>

③~⑦ <생 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심사하는 업무

2.~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21. (생략)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⑥ (생략)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③ <생 략>

**제51조(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
2. <삭 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③ <삭 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

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  
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략>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 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 되는 경우

**부칙 제15조(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1. 위반동기

-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3. 조치등의 가중·감경

####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예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 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제25조의3(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 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③ 증선위 조치안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와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와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 6. 30.>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별표22] 과태료부과기준(제390조 관련)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쿠.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36호	6,000만원

### □ 舊「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3.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4.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고발등)**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 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개정 2011.11.4><개정 2015.7.14.>

- (1)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7.14.>
- (가) 법인이 제시한 최근 사업연도(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감사인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상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a.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b. 당기(반기,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c.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 (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미만인 경우
-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59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과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62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현재의 상황에 더 이상 충분히 목적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차입자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유사한 차입자에 관한 이용가능한 과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손상차손을 추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를 조정하는 데 기업의 경험적 판단을 사용한다(부록 A의 문단 AG89 참조).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작성의 필수적 요소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 6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64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한다(문단 59 참조).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한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 제1036호 자산손상

9.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징후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10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문단 80~99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 (6)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희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등을 포함한다.
- 14 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 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 30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 요소를 반영한다.
- (1)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 (2) ~ (5) (생략)
-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1) 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 때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 (2)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 34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생긴 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한다. 실제 현금흐름이 창출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 경영진은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의 실제 결과와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

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 한다.

## 제1109호 금융상품

B5.5.5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묶을 수 있다.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묶어서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상품의 형태
- (2)신용위험 등급
- (3)담보의 형태
- (4)최초 인식일
- (5)만기까지 남은 기간
- (6)산업
- (7)차입자의 지역적 위치
- (8)담보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금융자산 대비 담보의 가치(예: 일부 국가의 소구권이 없는 대여금이나 담보인정비율)

## □ 「회계감사기준」

###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500 감사증거

-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이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12.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20을 적용할 때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연결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44.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까지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 및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 1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 12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할 때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인 측면(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 징후 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기획감리실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862